

## 중·참의원 의사록(1948~2020)에서 나타나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 발언 및 인식\*

석 주 희\*

---

### 〈국문요약〉

이 글은 일본의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출신 중·참의원의 국회의사록을 통해 독도 관련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마네현은 2005년 1월 14일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했다. 이 글에서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국회의사록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주요 성청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독도 관련 인식은 첫째, 한국에 대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지역어민과 어업에 대해서는 영유권과 어업을 분리하고 정부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과 잠정수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양경계와 연계하여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대응차원에서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통한 직접적 대응과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다만 해상보안청에 대해서는 충돌을 우려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시마네현에서 직접 대응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론으로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출신 중·참의원은 정부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어민에 대해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해상보안청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주제어:** 독도, 시마네현, 돗토리현, 중·참의원 국회의사록,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

---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AHF-2021-기획연구-28)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juhee.suk@gmail.com)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국회의사록을 통해 정부와 각 성청 간 논의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도<sup>1)</sup>에 대한 일본 중앙정부의 인식과 시마네현·돗토리현 내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3월 16일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시마네현은 2005년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를 설치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연구와 고찰, 쟁점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회에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제3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第3期竹島問題研究会)'에서는 기존의 활동 결과를 포함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 『다케시마문제 100문 100답(竹島問題100問100答)』을 발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 관련 문헌과 자료에 대한 비판과 역사인식과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14년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월 공시된 중학교 사회과지리 '지도요령해설'에서 기존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를 둘러싸고 주장이 상이하다"는 내용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을 변경하였다. 일본의 초등학교(2020년도)와 중학교(2021년도)에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관한 내용을 수업에 포함하였다. 기존에 2017년도판 『중학학

1) 본문에서 독도(Dokdo, 獨島)는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케시마(竹島)' 또는 '죽도(竹島)'로 표기하였다. 연구회나 보고서, 특정한 날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로 그 외의 부분에서는 '죽도(竹島)'로 표기하였다.

습지도 요령해설 사회편(中學學指導要領社会編)], 『공민(公民)분야』 내용상 유의사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sup>2)</sup> “일본이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및 남쿠릴열도(北方領土)와 관련된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나, 센카쿠열도(尖閣諸島,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룰 것”이라고 되어 있다.

기존의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의 독도 관련 인식과 대응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인원(2021)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의 활동을 통해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합리화하고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송휘영(2021)과 김병연·이상균(2018)은 시마네현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송휘영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의 제4기 『다케시마(竹島)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각 학교의 학습지도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병연·이상균(2018)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시마네현 영토교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지방정부, 교육현장에서 영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마네현과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광진오(2014)와 한철호(2018) 등이 있다. 광진오(2014)는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일본이 전략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도록 선언했다고 보고 일본의 무주지 선점논리의 모순을 밝혔다. 한철호(2018)는 1880년부터 1905년까지 시마네현 관할지의 다케시마(竹島) 관련한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을 교과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를 일관되게 일본 고유영토로 서술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해당 시기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상명(2018)은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하여 일본의회의

2) “한일 중학생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2/syuchokorean\\_data/takeshimabooklet4\\_k.pdf](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2/syuchokorean_data/takeshimabooklet4_k.pdf), p. 5 (검색일: 2021. 6. 3.)

사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장근(3014)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의 사료를 통해 일본의 고유영토론 논리에 대한 창출 과정을 고찰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대응에 대하여 주로 역사적 자료 분석 또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의 연구 성과 및 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국회의사록 발언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회의사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요 성청의 대응과 인식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국회의사록은 일본의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會議録検索システム)<sup>3)</sup>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분석대상은 1948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사록 가운데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중·참의원의 ‘죽도(竹島)’ 관련 발언에 관한 것이다. 국회의사록을 통해 검색한 회의록은 관련 주제와 쟁점으로 분류하고 주요한 발언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표 1>과 <표 2>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중·참의원 가운데 ‘죽도(竹島)’ 관련한 발언의 유무 및 경력 등 간단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시마네현의 ‘죽도(竹島)’와 관련한 지역구 의원의 발언의 주요 쟁점과 중앙 성청에 대한 요구,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시마네현·돗토리현의 경우 독자적으로 ‘죽도(竹島)’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역사회와 어업 단체, 어민들의 요구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하였다.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시마네현·돗토리현 독도 관련 쟁점과 배경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다케시마(竹島) 조기 영토 반환을 위한 요청’을 하거나 전국지사회를 통한 연대 활동, 중참 양원 국회요청 및 본회의 채택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1952년 이승만 라

3) 国会會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검색일: 2021. 6. 3.).

〈표 1〉 시마네현(島根県) 지역구 중·참의원 명단 및 독도관련 국회의사록 유무

| 구분     | 성명     | 소속 정당     | 재임년도(기간)         | 독도 관련<br>의사록 유무 |
|--------|--------|-----------|------------------|-----------------|
| 중의원    | 石橋大吉   | 民主党       | 1986~2000        | ○               |
|        | 卜部政巳   | 日本社会党     | 1963, 1969       | ○               |
|        | 大橋武夫   | 自民党       | 1949~1976        | ○               |
|        | 生越三郎   | 民主党       | 1947             | -               |
|        | 亀井久興   | 自民党       | 1990~1993        | ○               |
|        | 木村栄    | 日本共産党     | 1947, 1949       | -               |
|        | 神門 至馬夫 | 日本社会党     | 1967, 1972       | -               |
|        | 校内 義雄  | 自民党       | 1952~2000        | ○               |
|        | 竹下登    | 自民党       | 1958~2000        | ○               |
|        | 竹下亘    | 自民党       | 2000~현재          | ○               |
|        | 梅野 泰二  | 日本社会党     | 1976, 1980       | ○               |
|        | 中林佳子   | 日本共産党     | 1979, 1983, 1997 | ○               |
|        | 中村英男   | 日本社会党     | 1952~1960        | -               |
|        | 錦織淳    | 民主党       | 1993~1996        | -               |
|        | 日高忠男   | 自由党       | 1952             | -               |
|        | 細田吉蔵   | 自民党       | 1960             | ○               |
|        | 細田博之   | 自民党       | 1990~현재          | ○               |
| 山本 利 寿 | 自民党    | 1949~1952 | ○                |                 |
| 吉原米治   | 日本社会党  | 1976~1990 | ○                |                 |
| 참의원    | 青木一彦   | 自民党       | 2010, 2016~현재    | ○               |
|        | 青木幹雄   | 自民党       | 1986             | ○               |
|        | 岩本久人   | 日本社会党     | 1989             | ○               |
|        | 影山俊太郎  | 自民党       | 1995, 2007       | -               |
|        | 亀井亜紀子  | 自民党       | 2007             | -               |
|        | 亀井久興   | 自民党       | 1974, 1986       | ○               |
|        | 小滝彬    | 自民党       | 1952, 1958       | ○               |
|        | 島田三郎   | 自民党       | 2013             | -               |
|        | 成相善十   | 自民党       | 1977~1989        | -               |
|        | 山本利寿   | 自民党       | 1958, 1962, 1968 | ○               |
|        | 舞立昇治   | 自民党       | 2013, 2016~현재    | ○               |
| 三浦靖    | 自民党    | 2019~현재   | -                |                 |

(출처: 필자 작성, 일본 국회의사록시스템(国会議事録システム)에서 키워드 '竹島'로 해당 의원의 발언 검색)

〈표 2〉 돗토리현(鳥取県) 지역구 중·참의원 명단 및 독도관련 국회의사록 유무

| 구분   | 성명    | 소속 정당     | 재임연도(기간)                     | 독도 관련<br>의사록 유무 |
|------|-------|-----------|------------------------------|-----------------|
| 중의원  | 相澤英之  | 自民党       | 1976~2003                    | -               |
|      | 赤沢正道  | 自民党       | 1946~1976                    | ○               |
|      | 赤澤亮正  | 自民党       | 2005~현재                      | ○               |
|      | 足鹿 覚  | 社会党       | 1949~(7회 당선)                 | ○               |
|      | 石破茂   | 自民党       | 1986~현재                      | ○               |
|      | 稲田直道  | 自民党       | 1946~1947, 1949~1953         | -               |
|      | 梶川静雄  | 日本社会党     | 1947~1949                    | -               |
|      | 門脇勝太郎 | 民主自民党     | 1949~1952                    | -               |
|      | 川上義博  | 自民党~民主党   | 2003~2005                    | ○               |
|      | 島田安夫  | 무소속 自民党   | 1972~1976, 1983~1984         | -               |
|      | 庄司彦男  | 日本社会党     | 1947~1949                    | -               |
|      | 武部文   | 日本社会党     | 1967, 1990                   | -               |
|      | 徳安実蔵  | 自由党       | 1955~1957, 1964, 1973~1975   | -               |
|      | 中田正美  | 自由党       | 1952                         | -               |
|      | 野坂浩賢  | 社会党       | 1972~1983, 1986~1996         | ○               |
|      | 平林鴻三  | 自民党       | 1983~1990                    | -               |
|      | 古井喜美  | 自由民主党     | 1952~1972, 1976~1983         | -               |
| 堀江実蔵 | 日本社会党 | 1903~1986 | -                            |                 |
| 米原昶  | 日本共産党 | 1909~1982 | -                            |                 |
| 참의원  | 川上義博  | 自民党~民主党   | 2007~2013                    | ○               |
|      | 青木一彦  | 自民党       | 2010~현재                      | ○               |
|      | 足鹿 覚  | 社会党       | 1968                         | ○               |
|      | 石破二郎  | 自民党       | 1974~1981                    | *               |
|      | 門田定蔵  | 무소속       | 1947                         | -               |
|      | 川上義博  | 무소속       | 2007~2013                    | ○               |
|      | 小林国司  | 自民党       | 1968                         | -               |
|      | 坂野重信  | 自民党       | 1974~2002                    | ○               |
|      | 田中信義  | 民主党       | 1947                         | -               |
|      | 田村耕太郎 | 自民党       | 2002~2010                    | -               |
|      | 常田享詳  | 自民党, 무소속  | 1995~2007                    | ○               |
|      | 中田吉雄  | 무소속       | 1950~1965                    | -               |
|      | 仲原善一  | 自民党       | 1956                         | -               |
|      | 西村尚治  | 自民党       | 1965~, 1971, 1977, 1983~1989 | -               |
|      | 浜田和幸  | 무소속       | 2010~2016                    | ○               |
|      | 広田幸一  | 日本社会党     | 1977                         | -               |
|      | 舞立昇治  | 自民党       | 2013~현재                      | ○               |
| 宮崎正雄 | 自民党   | 1965      | -                            |                 |
| 三好英之 | 무소속   | 1953~1956 | -                            |                 |
| 吉田達男 | 무소속   | 1989      | -                            |                 |

(출처: 필자 작성, 일본 국회의사록시스템 (国会議事録システム)에서 키워드 '竹島'로 해당 의원의 발언 검색)

인 선언, 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에 대해서 시마네현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발언을 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국회의사록의 가운데 ‘죽도(竹島)’ 관련한 내용을 제시한다. 3장은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인식에 관한 것으로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지역어민과 어업에 관한 인식 3) 배타적 경제수역·잠정수역 관련 인식으로 구성된다. 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았다. 지역어민과 어업에 관한 부분에서는 영유권과 분리하려는 지역 어민들의 입장과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해양경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대응과 관련한 발언들을 제시한다. 4장은 1)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과 대응 2) 일본 정부 및 외무성 해상보안청에 대한 대응 요청 3)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 및 요청 4)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법을 통한 해결 모색 등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시마네현·돗토리현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장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2. 시마네현·돗토리현 독도 관련 주요 쟁점과 배경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국회의사록 문서를 통한 조사 연구로서 시마네현(島根県)·돗토리현(鳥取県)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한 인식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시마네현에서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작성하였다. 일본은 동 고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언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인용했다(곽진오 2010, 59).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한일 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나타났다(박창건

2008, 364). 시마네현에서는 죽도(竹島)에 대해서 폭넓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케시마의 날(竹島) 조례를 공포한 이래 시마네현과 일본정부는 정치적으로 연계된 행보를 보였다(박창권 2008, 365).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에서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게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시마네현에서는 국가의 외교력과 국민 전체의 이해와 여론의 활발한 지지가 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역사회에는 개발시설의 설치 등 국민을 향해 홍보와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sup>4)</sup>

시마네현에서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했다.<sup>5)</sup> 첫째,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이다.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에 관한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현민과 시정촌, 현이 일체가 되어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겨냥한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현 조례를 제정하였다. 둘째, 다케시마(竹島) 조기 영토권 확립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요청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일본 정부에게 2005년부터 국가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매년 5~6월, 11~12월에 걸쳐 ‘국가의 시책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중점요청(国の施策及び予算編成等に係る重点要望)’을 각 관계성청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게 제출 ② 전국지사회 중국지방(中国地方)지사회를 통한 요청, ③ 중·참양원 국회요청 및 본회의 채택, ④ 그 외 조직을 통한 요청 활동이다. 시마네현의 주요 활동 내역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4) 島根県, 『島根県離島振興計画(平成25年度~平成34年度)』 p.46

5)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2/>  
(검색일: 2021.5.20)

〈표 3〉 독도 관련 시마네현 주요 활동(1952~2017)

| 일자         | 시마네현 주요 활동                                       |
|------------|--|
| 1905.2.22  |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작성                                |
| 1953.6.27  | · 시마네현, 해상보안청과 독도 조사<br>· 한국인 6명에게 퇴거명령, 나무기둥 설치 |
| 1965.7.6   | · 시마네현 지사, 현의회의장 연명으로 정부에 독도영토권 확보 요청            |
| 1977.3.19  | · 시마네현의회, 독도영유권확립 및 안전조업확보에 대한 결의                |
| 1977.4.27  | · 시마네현 독도문제해결촉진협의회(島根県竹島問題解決促進協議会)설립             |
| 1987.3.11  | · 독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県民大会)설립       |
| 2004.3.15  | · 시마네현의회 일본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서 채택           |
| 2004.10.25 | · 시마네현, 일본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청                    |
| 2005.3.    | ·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공포·시행                     |
| 2006.6.    | · 다케시마자료실(竹島資料室) 설립                              |
| 2006.8.16  | ·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서' 중의원 참의원에 제출           |
| 2007.3.    | · 제1기『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
| 2012.8.    | · 제2기『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
| 2014.2.    | · 제3기『죽도문제100문100답(竹島問題100問100答)』                |
| 2015.8.    | · 제3기『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
| 2020.3     | · 제4기『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

(출처: 시마네현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島根県Web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 (검색일: 2021. 4. 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시마네현에서는 '죽도·남쿠릴열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를 설립하고 '죽도(竹島)의 영토권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본 청원서에는 참의원의원인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와 카게야마 슌타로(影山俊太郎)이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도(竹島)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시마네현(島根県) 오키군(隱岐郡) 오키노시마쵸(隱岐の島町)에 소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50년 이상에 걸쳐 본 섬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어업권 등 일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도(竹島)의 이용에 관한 신법을 제정하고 민간인의 이주 등을 영토권 기정 사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토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인 문제로 국가와 국가 간 외교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움직임은 일본의 국민 감정을 역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감이다. 한편, 남쿠릴열도(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소관하는 조직으로 ‘내각관방북방대책본부’가 있어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을 제정하고 홍보시설인 ‘북방관(北方館)’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정착시키고 있으나 죽도(竹島) 문제는 남쿠릴열도(북방영토)문제와 비교하여 국가에서 홍보 활동이 극히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시마네현에서는 국민 여론의 계발을 모색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한다는 현민의 염원으로 2005년 3월 ‘죽도(竹島)의 날’을 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그 후 죽도(竹島)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 죽도(竹島)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게 실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다.

- 죽도(竹島)의 영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엄중하게 항의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의 해결을 포함하여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향한 외교 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모색할 것
- 남쿠릴열도(北方領土)와 같이 국가에서 죽도 문제에 관한 홍보 활동을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홍보 계몽활동에 주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sup>6)</sup>

셋째,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에 관한 것이다. 시마네현은

6) 『竹島の領土権の早期確立に関する請願書』

2005년 6월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를 설치하여 역사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연구성과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제출하였다. 제1기의 활동보고는 2006년 5월과 2007년 3월에 이루어졌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제2기는 2011년 2월과 2012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다케시마(竹島)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를 심화시키고 국민여론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제3기 활동은 2012년 10월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다케시마문제 100문 100답(竹島問題100問100答)』를 발간했다. 제4기는 2019년 중간보고서, 2020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연구 보고서 및 ‘다케시마(竹島)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 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내용에서는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지는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학습’과 관련한 사항과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초·중·고 특별지원학교에 대한 학습지도안을 검토했다.<sup>7)</sup> 2021년 10월 제5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를 실시하고 연구회 현황을 보고했다. 제5기에는 대학 교수, 시마네현 중고등학교 교사,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자문 등이 참가했다. 연구회는 죽도(竹島)에 관한 한국 측의 주장 및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와 자료연구 강화, 죽도(竹島) 학습 추진을 위한 검토, 자료 작성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팸플릿이나 책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활동이다. 시마네현 내외의 움직임이나 미디어 보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였다. 시마네현은 지역주민의 관심 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죽도(竹島)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여론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7)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final\\_report4.html](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final_report4.html) (검색일: 2021. 5. 20.)

### 3.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인식

#### 1)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인식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를 향해 죽도(竹島)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아카자와 마사미치(赤沢正道)는 “저는 시마네현 출신으로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죽도(竹島)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은 살고 있지 않지만 귀속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중략...역사적으로 이것은 일본의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록 바위산(岩山)이라고 해도 우리는 한일 교섭의 대상으로 이것이 다루어지는 한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8)</sup>고 밝혔다. 토가노 타이지(桐野泰二)는 “죽도(竹島)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島根県 隠岐郡 五箇村)의 행정구역에 있다는 점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 죽도(竹島)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과거에도 중대한 일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이승만 라인 선언 당시이며 두 번째는 한일협정 체결 시기이다. 지난 두 번은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를 대응했으나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 중략 ... 이번 정부에서는 죽도(竹島) 문제 영유권을 둘러싸고 죽도(竹島) 주변 어업문제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sup>9)</sup>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발언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토가노는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죽도(竹島)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는 시마네현 선출로 특히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죽도(竹島)가 일본 고유의

8) 第46回 国会衆議院地方行政委員会 第26号 1964年 3月 26日

9) 第80回 国会衆議院内閣委員会 第15号 1977年 5月 18日

영토라는 것은 남쿠릴열도와 같다. 심지어 러시아(구 소련)이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보다 죽도(竹島)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훨씬 약하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난 1952년 죽도(竹島)가 무인도라는 점에서 한국이 그것을 기회로 갑자기 상륙하고 점거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sup>10)</sup>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인 호소다 키치조(細田吉蔵)는 “나는 시마네현 선출로서 죽도(竹島) 문제에 대해 특히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sup>11)</sup>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시쿠라우치 요시오(櫻内義雄)도 “말할 것도 없이 시종일관 죽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말씀드린다.”<sup>12)</sup>라고 발언했으며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는 “죽도(竹島)는 고문서에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 있다.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 소속으로 그곳에서 영유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또한 어업에 관한 실적이 있는 등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일 협상과정에서 죽도(竹島) 문제는 이른바 보류하게 된 것이다. 매우 유감이며 강력히 항의한다.”<sup>13)</sup>고 말했다.

이처럼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후 1990년대까지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으며 죽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게 신속하고 강경한 태도로 한국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이래 독도를 한일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 
- 10) 第84回 国会衆議院 内閣委員会 第7号 1978年 3月 2日
  - 11) 第91回 国会參議院 予算委員会 第2分科会 第3号 1980年 4月 1日
  - 12) 第96回 衆議院 決算委員会 第2号 1982年 4月 9日
  - 13) 第143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 第7号 1998年 10月 14日

## 2) 시마네현 · 돗토리현 지역어민과 어업에 대한 인식

시마네현 · 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어민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보호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시마네현 · 돗토리현에서 어민들은 생계 유지 및 어업과 관련하여 독도에서 조업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부분 지역어민들의 어업 보상을 질문하거나 요청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라베 마사미(卜部正巳)는 1960년대부터 국회에서 어민과 관련한 발언을 해왔다. 우라베 마사미는 “죽도(竹島)는 우리 시마네현의 섬이다. 이 해역은 무엇보다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일회담에서 교섭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독도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up>14)</sup>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카무라 히데오(中村英男)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였다. 나카무라는 “죽도(竹島)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지역의 어업 보상 문제도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는 외무대신 보다는 농림대신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 죽도(竹島) 주변의 어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sup>15)</sup>라고 말하며 지역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나카바야시 요시코(中林佳子)는 “올해 5월 1일부터 오징어잡이 해금을 맞이한다. 따라서 당연히 죽도(竹島) 문제가 부각된다. 일본의 주권과 어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죽도(竹島) 문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 1955년 7월 25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전 수상은 “솔직히 말하면 죽도(竹島)는 일본의 영토이다. 일본의 영토를 점령당한 것이므로 이는 침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 죽도(竹島)는 그 후 병사 등 건축물이 증가하고 한국 군대가 증가하는 것 이외의 사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그

14) 第49回 国会 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2号 1965年 8月 5日

15) 第50回 国会 參議院 日韓條約等特別委員會 第9号 1965年 12月 3日

점에 대해 묻고 싶다.”<sup>16)</sup>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노사카 코켄(野坂浩賢)은 독도 주변의 어업 대책에 대하여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노사카는 1978년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에 저는 죽도(竹島) 주변에서의 어업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간결하게 질문을 하고자 한다. 오늘도 참의원 상공위원회에서는 한일대륙붕협정에 관한 국내법의 문제 등 이와 관련하여 죽도(竹島) 주변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5월 8일, 9일 한국 경비정이 일본 어민들에게 12해리 밖으로 퇴거 명령을 하였으며 오늘까지 여러 움직임이 있다.”<sup>17)</sup>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미야케(三宅和助) 정부위원은 “일본 정부의 사정이 있으므로 향후 조정을 해서 결정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노사카는 다시 한 번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1979년 5월 국회에서 노사카는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의 대응책만 있을 뿐 임기응변이라는 비판이 있어 현지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산청 장관의 말에 의하면 적당한 조치로서 현장과의 연락을 취한다고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현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카는 “예산위원회에서도 아시아 국장에게 혹은 장관에게 질문을 했지만 죽도(竹島)라는 문제가 있다. 어민들로부터 5월 1일경까지 어떻게든 결판을 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5월 1일부터 어업은 금지되었으나, 저희 향토인 앞바다의 어업대책협의회 등에서는 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략 ...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현지 어민의 생활문제와 관련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sup>18)</sup>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야케 와스케(三宅和助) 정부위원은 “죽도(竹島)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조업이라는 것을 영토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하고 싶다. 특히 어업 관계자에게 있어서 생활이 걸린 문제라고

16) 第91回 国会 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8号 1970年 4月 15日

17) 第84回 国会 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28号 1978年 6月 1日

18) 第87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5号 1979年 5月 24日

지적하였으나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좀처럼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산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지 지역주민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서의 어업문제와 한일 관계의 맥락에서 독도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여 접근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어장으로서 독도의 중요성은 지역 어민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시바시 다이키치(石橋大吉)는 1989년 “죽도(竹島)를 일본 영토로 하여 200해리 어업수역을 설정하면 간사이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육지 면적에 상당하는 어장이 된다. 매우 좁아지는 어장 속에서 하루빨리 죽도(竹島)를 한국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는 시마네현이나 돗토리현 어민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sup>19)</sup>이라고 발언하는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업에 관한 어민들의 입장을 중앙정부에게 전달하였다. 이시바시는 1996년에도 “시마네현이나 돗토리현 등 현민과 어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능한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sup>20)</sup>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장과 어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3) 배타적 경제수역·잠정 수역 관련 인식

해양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대통령이 보존 수역과 대륙붕에 관해 최초로 권리를 주장한 ‘트루먼 선언’ 이후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각 국가에서는 연안 및 해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해양기술 개발로 해양자원 개발 및 해상 안보를 둘러싼 분쟁이 나타났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채택된 이래 세계 해양 질서는 ‘자유로운 바다’ 개념에서 ‘관리되는 바다’로 변화하였다(山本草二, 1992). 기존에 누구에게나

19) 第114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6回 1989年 5月 25日

20) 第136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農林水産委員会·運輸委員会·科学技術委員会 連合審査会 第1号, 1996年 5月 24日

공유되는 자원으로 인식되던 바다가 국제 해역의 연안국과 이용국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해양을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1958년과 1960년, 1973년 회의에서 200해리 어업 수역 설정이 채택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해양질서가 개편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토가노 다이지(桐野泰二)는 “죽도(竹島) 주변은 일본해에서도 유수의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죽도(竹島) 주변 200해리 내 어획고는 연간 1만 톤이며 금액으로 약 27억 엔 정도이다. 현재 죽도(竹島) 주변의 일본 어선의 조업 상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특별한 분쟁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영유권은 차치하더라도 그 주변 어선의 조업의 안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하는 것으로,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주시기 바란다.”<sup>21)</sup>고 발언했다. 이 같은 입장은 영유권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서둘러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죽도(竹島)가 대륙붕 혹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 전관 수역 기점이 되는가 등에 대해서는 이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이러한 점에 대해 조속히 견해를 정리해 하길 바란다.”<sup>22)</sup>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관심을 나타낸다.

토가노 다이지는 일본 정부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여 한일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작년 9월 한일각료회의에서 불행히도 죽도(竹島)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회의가 끝나고 일본은 죽도(竹島)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앞으로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영토권과 분리하여 죽도(竹島) 주

21) 第84回 国会衆議院 内閣委員会 第7号 1978年 3月 2日

22) 第87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分科会 第1号 1979年 2月 27日

변의 일본 어선의 안전 조업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는 12해리 밖의 공해상 안전조업을 말하며 12해리 내 일본 어선의 안전조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입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해 어민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무대신은 ‘안전 조업 문제에 대해 합의가 있었으며 지금 실무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금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누구와 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sup>23)</sup>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요시하라 요네지(吉原米治)는 1982년 2월 “죽도(竹島)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면서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에 속하는 섬이다. 다만 오늘날까지 이승만 라인 선언부터 약 30년간 한국의 불법점거가 이어지고 있다. 1978년 5월 8일 이후 독도 주변 12해리 내 해역에서 일본 어선을 불법으로 퇴거시키고 많은 어민에게 불안과 막대한 어업 손실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다지 정치문제화 되지 않는, 무엇인가 피하고자 한다. ... 중략 ... 한국과는 1965년 6월 조약으로도 체결되어 있는 이른바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 동맹국이면서 왜 한일각료회의 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매우 의아하다.”<sup>24)</sup>고 말했다.

이시마시 다이키치(石橋大吉)는 1998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잠정수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정 수역에 직접 관계있는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등 연안의 어민, 어업관계자 등을 생각하면 잠정수역은 최대한 작게 설정하고 싶다. 이에 대해 수산청이나 외무성 등 정부 측의 생각을 듣고 싶다.”<sup>25)</sup>고 말했다. 쓰네다 다카요시(常田享詳)는 2007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독도 주변 어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환기시켰다. “저희 산인(山陰), 시마네현, 돗토리현, 효고현 지역이 중심이지만 이 세 현은 매우

23) 第87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分科会 第1号 1979年 2月 27日

24) 第96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分科会 第1号 1982年 2月 26日

25) 第142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9号 1998年 3月 31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다른 나라 배가 들어오지만 죽도(竹島) 문제를 가지는 잠정수역에서는 한국과의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상보안청 등이 한국 어선을 나포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휴어기간이 끝나고 일본이 나가면 어망이 혼탁해지고 또 그물을 방치한 채 도망가서 더 이상 고기잡이가 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어장이 잠정수역으로 되어 있어 서로가 원하는 잠정수역, 즉 죽도(竹島) 주변의 잠정수역이 실질적으로 이미 한국의 실효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저는 현재의 어장 정비계획이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선 지금 수산청 장관으로부터 일본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들었지만 우선 먼저 산인(山陰) 앞 바다에서 사업을 착수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sup>26)</sup>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외무성이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는 2013년 외무성의 대응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발언했다. 가와카미는 2013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는 돗토리현 출신으로 한일 어업 협정 중 잠정 수역을 확정했다. 그것도 일본 측에 매우 불리한 어업 협정이다. 그래서 불법 조업이라든가 어구의 회수라든지 감시를 계속 실시하기 위해 대략 매년 70억엔 정도를 내고 있다. 예컨대 일본 정부가 세금을 내고 단속을 하는 것이다. 죽도(竹島) 문제가 잠정수역 때문에 애매하게 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일본이 한국에게 유효지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sup>27)</sup>라고 말하며 일본의 어업협정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다.

26) 第166回 国会参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2号 2007年 5月 22日

27) 第183回 国会参議院 予算委員会 第15号 2013年 5月 8日

#### 4. 시마네현 · 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 대응 및 모색

본 장에서는 시마네현 · 돗토리현 지역구 중 · 참의원의 주요 의사록을 통해 독도 관련한 대응을 직접 대응, 일본 정부 성청에 대한 요청,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한다. 국회의사록에서는 시마네현 · 돗토리현의 독도에 관하여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며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요청, 배타적 경제수역 및 잠정수역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 등이 주로 나타났다. 시마네현 · 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은 수상과 정부, 각 부처에 대하여 대응을 요청하거나 또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및 연구회 모임 등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구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1)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안 제정

시마네현에서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 배경으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어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였다. 반면 일본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시마네현 의원들이 다소 불만을 제기하였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亄)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경위를 설명하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다케시타는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조례가 통과되었다. 왜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시마네현 의회가 설정했는가하면 지금부터 꼭 100년 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서 다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의 영토로 공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의 날 설정을 두고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엄연히 죽도(竹

島) 영유권 문제가 남아 있다. 죽도(竹島)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변화가 없고 확신한다.”<sup>28)</sup>고 발언했다.

한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본 정부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들은 시마네현에서 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다케시마는 “왜 이 시기에 시마네현이 움직였는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본인은 시마네 출신으로 시마네현에서 자라고 시마네현의 흙이 될 사람이다. … 중략 …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이래 약 3만 여척의 배가 나포되고 3,929명이 억류되었다. 이 중 44명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국회 내에서 오키나와 북방 특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죽도(竹島) 문제는 자칫하면 잊혀 질 수 있다. 시마네현 출신으로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남쿠릴열도(北方領土)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였다. 그는 “북방영토(北方領土)는 외무성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죽도(竹島)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어민들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선박이 칠거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죽도(竹島)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시마네현이 오늘날 ‘다케시마(竹島)의 날’이라고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sup>29)</sup>고 밝혔다.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인 아오키 카즈히코(青木一彦)는 2012년 3월 22일에 개최한 참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저는 지역이 시마네현이다. 시마네현은 죽도(竹島)를 보유하고 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경 외딴 섬에 자위대 시설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오키는 “예를 들면 ‘북방영토(北方領土)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제 조사에 의하면 2월 7일이다. 1975년에 반환운동이 고조되면서 각 단체가 결의하여 1980년에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그러나 저희 시마네현에서는 슬프게도 현 의회가 주

28) 第162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 第3号 2005年 3月 16日

29) 第162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 第3号 2005年 3月 16日

도하여 죽도(竹島)의 날을 조례화했다. 만약 무슨 일이 있는 경우 죽도(竹島)를 포함해 영토라는 것 또는 영토의 날을 국회에서 결의하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sup>30)</sup>고 말했다. 이처럼 남쿠릴열도(北方領土)에 대한 일본정부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과 달리 독도의 경우 시마네현 지역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는 “죽도(竹島)는 시마네현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어업 관계자 등도 포함하여 정확히 100년 전 국토로 확립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현에서 결의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무언가 하지 않을까 하였으나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거절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에서 하게 된 경위가 있다.”<sup>31)</sup>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두고 현에서 직접 실시한 경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거절로 불가피하게 현에서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과정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발언이 있었다.

카메이 히사오키(亀井久興)는 2005년 3월 “이번 달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 관련 현 주최 행사도 있었고 대회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정부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죽도(竹島)도 일본의 주권에 관련한 큰 주제라고 생각하므로 정부에서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sup>32)</sup>고 발언했다.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북한에의 대응을 시작해 한일, 한미일의 제휴가 불가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카자와 료세이는 “최근의 한일 관계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죽도(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한 가운데 시마네

30) 第180回 国会参議院 予算委員会 公聴会 第1号 2012年 3月 22日

31) 第162回 国会参議院 予算委員会 第15号 2005年 3月 23日

32) 第171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1号 2009年 2月 26日

현 등이 주최하는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정세를 감안해 검토한 결과 정부 측에서는 와다 내각부 대신정무관이 참석할 것이다.”<sup>33)</sup>라고 말하며 정부 인사가 참석한 배경과 경위를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 것을 볼 때 '다케시마(竹島)의 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다.

## 2) 일본 정부 및 외무성·해상보안청에 대한 강경한 대응 요청

시마네현·돗토리현 의원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상보안청과 외무성 등 각 담당부처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이래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할 것과 가능한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내세웠다. 해상보안청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외무성에서 한일회담이나 실무회의 등을 통해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시마네현·돗토리현 의원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과 같이 회의록 내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쿠라우치 요시오(櫻内義雄)는 1980년대 전후 시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죽도(竹島) 불법 점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문의한다. 1982년 4월 현재, 합계 60차례의 항의를 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1978년 9월 개최된 제10회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당시 소노다 외무대신이 항의했으며, 1981년 3월에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서 당시 이토 외무대신이 1981년 11월 19일, 8월 28일 해상보안청에 의해 구두로 항의하고 1981년 11월 21일에도 구두 수준에서 항의했다. 죽도(竹島) 문제를 위해 방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한국 측 외무부 장관과 기탄

33) 第204回 国会衆議院 内閣委員会 第4号 2021年 2月 19日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sup>34)</sup>고 말했다. 이후에도 한국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하도록 시마네현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시바시 다이키치(石橋大吉)는 “1987년에 8월 19일 상세하게 질문한 바 있으나 해상보안청, 한국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도(竹島) 상황에 대하여 외무성의 조사 결과에 대해 문의한다. 또 이후 한국 어민 가운데 한 가구가 죽도(竹島)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이를 포함해서 자세한 상황을 묻고자 한다.”<sup>35)</sup>고 말했다. 이시바시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이 죽도(竹島)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실효지배 보다는 오히려 불법점거라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외무성에서 매년 항의를 하므로 방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역시 항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대로 한국의 군사적 점령 상태가 계속되면 포틀랜드 제도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국제적으로 죽도(竹島)가 한국 영토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sup>36)</sup>고 말했다. 카메이 아키코(亀井亜紀子)는 2012년 어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는 “죽도(竹島) 문제를 거론하면 위안부 문제를 말하고 인권을 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 측에서는 어민의 인권을 구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사실은 사실로서 한국 측에 주장하여 대응하길 바란다.”<sup>37)</sup>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으로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발언을 이어왔다. 이시바 시게루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에서 대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2002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아래에서 외무성 개혁이 착실하게 행해지고 외교 개혁도 착실하게 행해지므로 저희도 여당으로서도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싶다. 다만 죽

34) 第96回 国会衆議院 決算委員会 第2号 1982年 4月 19日

35) 第118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5回 1990年 6月 13日

36) 第136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農林水産委員会・運輸委員会・科学技術委員会 連合審査会 第1号 1996年 5月 24日

37) 決算委員会 質問議事録 2012年 8月 27日

도(竹島) 문제에 대해 어민들이 솔직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하면 외무성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 정부는 열심히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면, 혹은 지금 대신이 말한 것처럼 죽도(竹島)의 영유권을 근거로 한다면 그러한 것은 일본으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sup>38)</sup>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는 2004년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죽도(竹島)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동시에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했다. 이는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997년 11월에는 우리 측의 수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완공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2004년 1월 현재, 올해 1월 현재 죽도(竹島)에는 한국의 일반주민 1세대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비대원 38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sup>39)</sup>고 발언하는 등 한국의 독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이시바 시게루는 좀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죽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방위 백서의 출판을 늦춘 것에 대해 나는 그런 악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 중략 … 죽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술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sup>40)</sup>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이 23일, 한국 대통령이 불법 상륙을 한 것이 10일, 홍콩의 활동가들이 불법 상륙을 한 것이 15일로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상륙을 했을 때부터 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해 왔다. … 중략 …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줄곧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개최가 지연됐는가. 이 일에 대해 나는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싶다.”<sup>41)</sup>고 발언하

38) 第154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 第25号 2002年 7月 26日

39) 第159回 国会衆議院 安全保障委員会 第5号 2004年 3月 25日

40) 第175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1号 2010年 8月 2日

며 일본 내 논의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반발하였다. 하마다 카즈유키(浜田和幸)는 2015년 3월 26일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죽도(竹島)에 대하여 끈질기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으나 … 중략 … 현재는 점점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끈질긴 대응만으로 과연 죽도(竹島) 문제, 일본 고유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sup>42)</sup>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국무대신은 “죽도(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죽도(竹島)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한국 측이 실시하는 죽도(竹島)의 영유권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엄격하게 항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죽도(竹島) 문제의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합의 회부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기시다 후미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처와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고 싶다. 죽도(竹島)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대국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마다 카즈유키는 2015년 3월 26일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이 올해로 열 번째가 된다, 다케시마(竹島)의 날에 일본 정부의 정무관들도 요즘에는 많이 오게 되었다. 본인도 이웃한 시마네현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가고자 한다. 실은 한국에서 이번에 반대하는 시위가 많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두 나라 간에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1) 第180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8号 2012年 8月 23日

42) 第189回 国会參議院 外交防衛委員会 第4号 2015年 3月 26日

방향으로 논의하지는 양심적인 한국인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보도는 반대로 데모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을 다루고 있으며, 제대로 논의하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대회에 와 있는 것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도 일본이 더욱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sup>43)</sup>고 말했다. 이처럼 하마다 카즈유키는 한국인들 가운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독도와 관련하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응을 요구해왔던 기존의 입장에서 시민과 여론으로 활동을 확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타치 쇼지(舞上昇治)는 2021년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마이타치는 “죽도(竹島)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재작년, 돗토리·시마네 선거구의 대표가 되고 나서는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1954년, 1962년 및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사법재판소와 당사자 양방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고 제대로 할 경우에는 일본이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이타치 쇼지는 한국에 대하여 중요한 이웃나라로 인식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현재는 이른바 징용공이나 위안부문제 등으로 한일관계는 과거 최악이라고도 불리며 교착상태가 계속된다. 한국과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만큼 역사를 직시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시시비비로 하나하나 냉정하게 논의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죽도(竹島) 문제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의 야당 후보 승리, 그리고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해서 냉정하게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도 일단 상설로 접어둔 상태에서는 일단 합의하에 제소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밟아서 일단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중재재판에 집행권한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은 있으므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43) 第189回 国会参議院 外交防衛委員会 第4号 2015年 3月 26日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여론도 우군이 되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죽도(竹島)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에 중지부가 찍혀 마침내 한국 국민도 여론이 환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4)</sup>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은 죽도(竹島)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한일 관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1) 외무성에 대한 강경한 대응 요청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게 정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외무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온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발언하였다. 이시바시 다이키치(石橋大吉)는 1987년 8월 19일 농림수산업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외무성은 한국의 죽도(竹島) 불법 점거에 대해 몇 번이나 항의했는지 그것은 문서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모두 묻고 싶다.”<sup>45)</sup>고 말하며 “외무성에 묻는다. 죽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이다. 이 점에 대해 외무성도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는 없겠으나 오늘날 이 문제를 일체 생략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는 죽도(竹島)는 한국의 군사점령 아래 사실상 지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 중략 ...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조인에서 한일 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다. 죽도(竹島) 귀속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sup>46)</sup>고 말하며 외무성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이시바시 시게루는 동 회의에서 “한국은 일관되게 죽도(竹島)가 한국 고유

44) 第204回 国会參議院 決算委員會 第3号 2020年 4月 12日

45) 第109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會 第4号 1987年 8月 19日

46) 第109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會 第4号 1987年 8月 19日

의 영토이며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죽도(竹島)가 분쟁에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외교적인 경로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며 둘째 단계로서 조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조정 방안이 생기더라도 한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교환공문이 죽도(竹島)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일본에는 매우 불리하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외무성의 견해를 듣고 싶다.”<sup>47)</sup>고 말하며 일본에게 불리한 입장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발언을 했다.

이시바시 시게루는 1990년에도 외무성에 대하여 불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현재 상황은 1987년 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1987년 8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외무성의 답변에 대해 한국이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죽도(竹島)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을 주장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요구한 이래 구상서의 형태로 53차례 항의를 했다. 또 한일 외상회담, 외상레벨에서 제기한 횡수는 15회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한다. 최근 한일 최고위 수준의 회담에서 죽도(竹島)에 대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교섭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실속이 있는 교섭이 되었는지.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외무성은 형식적인 구상서를 되풀이할 뿐 강력한 협상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sup>48)</sup>고 말했다.

외무성의 대응에 대한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의 요청은 1965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나카무라 히데오(中村英男)는 “외무성이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도(竹島)는 한국의 영토라는 선언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 중략 ... 외무성이 공부가 부족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울릉도를 옛날에는 죽도(竹島)라 칭했다는 것이다. ... 중략 ... 이는 외무성이 공부가 부족했고 아무래도 착오한 것은 아닌가한다.”<sup>49)</sup>

47) 第109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4号 1987年 8月 19日

48) 第118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5回 1990年 6月 13日

49) 第50回 国会參議院 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 第9号 1965年 12月 3日

라고 말했다. 도가노 다이지(梅野泰二)는 “1977년 4월 6일 시마네현 어업단체 대표가 후쿠다 총리를 만났을 때 후쿠다 총리는 죽도(竹島)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을에 열리는 한일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식 의제는 되지 않았다. 지금 죽도(竹島)에는 한국 깃발이 서 있으며 이는 영유권을 나타낸다. 죽도(竹島)에 대한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sup>50)</sup>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에 대해 독도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발언은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발언 가운데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사쿠라우치 요시오(櫻内義雄)는 1982년 2월 26일 예산위원회 제2분과회에서 “죽도(竹島)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의) 부당한 점거가 진행되고 있고 기존보다 한층 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진다.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부당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시종 일관 말하고 있다.”<sup>51)</sup>고 말했다. 같은 해 4월에 개최한 국회 중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北方)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와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사쿠라우치 요시오는 “영토 문제는 영토문제, 경제협력은 외교상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 중략 … 영토문제와 경제협력은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 바,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과 별도로 죽도(竹島)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의견을 말하고 항의할 생각이다.”<sup>52)</sup>라고 말했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는 2005년 3월 16일 외무위원회에서 “영토문제는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우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영토문제를 가지고 이만큼 우호관계를 구축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토문제가 해결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앞으로

50) 第84回 国会衆議院 内閣委員会 第7号 1978年 3月 2日

51) 第96回 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分科会 第1号 1982年 2月 26日

52) 第96回 国会衆議院 沖縄及北方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9号 1982年 4月 26日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 혹은 죽도(竹島)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한다.”<sup>53)</sup>고 발언했다.

## (2) 해상보안청에 대한 대응 요청

해상보안청에 대해서는 외무성과 같이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의 경비정 등 방위와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시바시 다이키치(石橋大吉)는 “해상보안청에게 질문한다. 죽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한국 외교부는 1978년 5월 8일 주한일본 대사관에게 죽도(竹島)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은 퇴거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다음날 9일에는 이 해역에 한국 경비정이 나타나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이 죽도(竹島) 12해리 밖으로 퇴거를 당했다. 당시 이 해역에서 시마네현·돗토리현·야마구치현 후쿠오카 현 등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 등 약 100여척이 조업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일본 어선의 조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항의했으나 그 후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후 만 10여년이 지났으나 한국이 불법으로 군사점령을 한 독도의 최근 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근황을 알고 싶다.”<sup>54)</sup>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점령 또는 한국의 독도 방위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지닌 제한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에 대한 요청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다. 나카바야시 요시코(中林佳子)는 1970년 4월 15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일본은 정부기관으로서 듣고 있을 뿐이다. 농림부라서 모른척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 중략 ... 모른다, 알지 못한다 등은 국회의 답변이 되지 않는다. 잘 알아보고 제대로 어떠한지 나중에 대답해 줄 수 있는가”<sup>55)</sup>라고 말하며 “1968년 9월 한일 각료회의 이후 한국 측은 9

53) 第162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 第3号 2005年 3月 16日

54) 第109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4号 1987年 8月 19日

55) 第91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8号 1970年 4月 15日

월 4일 신문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나왔으나 9월 8일 일본 신문에서는 죽도(竹島) 문제에서 합의는 없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 중략 … 합의에 근거해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안전 조업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는가?<sup>56)</sup>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나카바야시 요시코는 동 회의에서 “결국 죽도(竹島) 주변에서 어업을 하는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어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 1978년 5월부터 2년간, 오징어잡이만 하더라도 78년 봄과 가을, 79년 봄과 가을 기간 동안 전혀 조업을 하지 못했다. 단순히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대응은 냉정하다. 수산청의 경우 1978년 특별 용자 밖에는 없다. … 중략 … 일본 정부는 외교상 실정에 책임을 져야한다.”<sup>57)</sup>고 말하며 일본의 외교적 대응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했다. 2012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관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는 2012년 1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영토의 날을 만들어서 북방대책본부를 확충하고 영토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담당 장관을 정하도록 한다. 특히 죽도(竹島)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011년 12월 18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제기했는가? 독도 콘서트나 패션쇼 개최, 대규모 부두, 헬기장, 숙박 시설 건설에 대해 항의를 했는가?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sup>58)</sup>라고 일본 외무성과 수상의 대처에 대하여 비판했다.

### 3) 1965년 전후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 및 요청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장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1965년 이전에는 이승만 라인과 그에 대한 대응, 역사적으로

56) 第91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8号 1970年 4月 15日

57) 第91回 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員会 第18号 1970年 4月 15日

58) 第180回 国会衆議院 本会議 第2号 2012年 1月 26日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주로 나타났다. 1965년 이후에는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965 한일협정 체결 이전의 의사록 발언은 다음과 같다.

야마모토 토시나가(山本利寿)는 1952년부터 1958년까지 주로 1950년대 독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야마모토는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였다. “죽도(竹島)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영토로 선언한 것은 1905년 2월로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59)</sup>고 발언하였으며 1955년에는 이승만 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다. 야마모토는 “한일 회담의 암초가 되는 평화선 문제에 대해 특히 일본해에서 죽도(竹島)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 죽도(竹島)는 전쟁 이전 시마네현 관할 아래 있었으므로 시마네 현민 및 어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강화조약 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 중략 … 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 외무성 측의 실수라는 것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잡아 보았다. 죽도(竹島) 문제,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등에 대해 당국의 견해를 묻고 싶다.”<sup>60)</sup>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이승만 라인에 대해서 비판하며 일본정부가 교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결코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일본해에서 죽도(竹島)는 일본의 영토이다. 이는 한일 합방이전부터 일본의 영토로 확고했으며, 시마네현 관할 아래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으나 시마네현 어민은 이미 그 주변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 중략 … 그러나 방위청 장관도 한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원만한 교섭으로 문제를 타결하고자 한다. 다만 본 교섭에서 한국은 자기 영토라고 말하는데 일본은 왜 가만히 있는지, 방위청장관이 자위대가 출동할 단계가 아니라 고 하는 것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sup>61)</sup>고 발언했다.

59) 第13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會 第26号 1952年 5月 23日

60) 第22回 国会衆議院 外務委員會 第12号 1955年 5月 30日

61) 第28回 国会參議院 外務委員會 第7号 1958年 2月 27日

야마모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 당국은 시마네현 영토가 한국에 의해 침범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도 일본에 매우 불리할 것이다. 지금 외무당국이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려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중략 … 침범이라고 말해야 장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중략 … 나는 죽도(竹島)는 일본의 영토로 한일 합병 이전부터 시마네현 관할 하에 있던 우리 영토라고 생각한다.”<sup>62)</sup>고 말하며 다음날에도 이러한 발언을 이어갔다. 야마모토는 “일본해에 있는 죽도(竹島)는 한일 합병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다. 시마네현의 행정 관할 아래 있었다. 그것을 현재 한국이 실력행사로 탈취하고 있다. … 중략 … 죽도(竹島)를 탈환해도 되지만 이는 외교상 우리 측의 배려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이 틀립었다.”<sup>63)</sup>고 말했다.

나카무라 히에오(中村英男)는 “일본해에서 죽도(竹島)를 포함한 이승만 라인으로 죽도(竹島)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확실히 해결되지 않다. 이는 단순히 어민이 어장을 제약받는 것 뿐 아니라 무인도로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다. 일본의 영토가 침범 당했을 때 일본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눈에 상당히 약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중략 … 죽도(竹島)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 간 소유권을 둘러싸고 교섭이 진행되는지 이는 구두인지 문서인지 물어보고자 한다.”<sup>64)</sup>고 말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강화되었다. 이에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은 일본 정부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야마모토 토시나가(山本利寿)는 “죽도(竹島)가 일본의 영토임은 여러 자료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화에 응

62) 第28回 国会參議院 外務委員會 第7号 1958年 2月 27日

63) 第28回 国会參議院 外務委員會 第8号 1958年 2月 28日

64) 第16回 国会衆議院 水産委員會 第23号 1953年 8月 4日

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죽도(竹島)를 무력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은 가지지 않으며 무력을 가지고 독도에 들어갈 수 없다.”<sup>65)</sup>고 말했다. 시쿠라우치 요시오(櫻内義雄)는 “한일 국교회복 시 분쟁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협의한 이래 죽도(竹島)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sup>66)</sup>라고 말하며 경제문제와의 연계를 경계하였다.

#### 4)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법을 통한 해결 모색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에 대해 이시바시 다이키치(石橋大吉)는 “국제법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중략 ... 죽도(竹島)는 주변 어업권에 대해 일본해 연안의 주민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것이 한국의 것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든다. 죽도(竹島)를 중심으로 200해리 선언을 하면 효고현(兵庫縣)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일본 육지 면적에 상당하는 정도로 넓은 해역과 매우 풍부한 어장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sup>67)</sup>라는 발언과 이어서 “죽도(竹島) 문제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죽도(竹島)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해결하지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일방적인 제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sup>68)</sup>라고 말했다.

1990년대에도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시바시 다이키치는 “첫째는 죽도(竹島)문제와 무관하다면 배타적 경제수역 설

65) 第68回国会参议院 予算委员会 第6号 1972年 4月 6日

66) 参议院予算委员会 第11号 1982年 3月 18日

67) 第109回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员会 第4号 1987年 8月 19日

68) 第109回国会衆議院 農林水産委员会 第4号 1987年 8月 19日

정과 해양법, 전면 적용이라는 원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둘째 영토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죽도(竹島) 문제에 대해 양측이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등이다.”<sup>69)</sup> 동 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 수역 설정에서 영토문제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시바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 수역 설정에서 영토문제로서 죽도(竹島) 문제를 보류(표류가 아닌)한다면 섬의 존재를 무시하고 선 긋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 죽도(竹島)는 한국의 경제수역인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한일 양측이 영토문제를 두고 합의를 형성한다는 것과 공동 관리 등도 있으나 이에 대한 외무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sup>70)</sup>이라고 말했다.

토가노 다이지(梅野泰二)는 “죽도(竹島) 문제는 한일 조약 체결 시 아무렇게나 처리한 것이 결국 오늘날 그 불씨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한일 협정 체결이후 어디에도 죽도(竹島)라는 글씨는 나오지 않는다. 이 때 한일 간 미해결 현안에 포함하여 문제를 처리하는데 타결했다. ... 중략 ... 결국 교환공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번에는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다.”<sup>71)</sup>고 말했다. 한편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가졌으나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미국 측에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었다. 야마모토 토시나가(山本利寿)는 “한일 문제에 대해 실제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략 ... 죽도(竹島)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분명 우리 영토임을 우리 당국이 종종 발표하고 있다. ... 중략 ... 죽도(竹島)가 일본의 영토임을 우리가 주장하는 한 한국은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영토가 사실상 침략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당연하며 혹은 미국 측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69) 第136回 衆議院 外務委員會・農林水産委員會・運輸委員會・科学技術委員會 連合審査会 第1号 1996年 5月 24日

70) 第136回 衆議院 外務委員會・農林水産委員會・運輸委員會・科学技術委員會 連合審査会 第1号 1996年 5月 24日

71) 第80回 国会衆議院 内閣委員會 第15号 1977年 5月 18日

해주었으면 한다.”<sup>72)</sup>고 말했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1947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의원의 국회 의사록을 통해 독도 및 어업과 관련한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시마네현·돗토리현은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며 2005년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문제연구소(竹島問題研究所)’를 설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와 관련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무성과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일본 이도(離島)센터의 홍보지인 『시마(島)』에 영토권 확립에 관한 주장을 게재하였다. 영토 주권을 둘러싼 국내의 발신과 관련하여 지식인 간담회 및 제언을 발표하고 정치가와 민간 단체, 지식인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돗토리현에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현의 기본적인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竹島問題を視界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를 게재하였다. 돗토리현은 외무성과 다케시마문제연구소(竹島問題研究所)와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12월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領土・主權対策企画調整室)’을 신설하였다.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해양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및 대응, 관련 정보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쿄도 치요다구(千代田区) 가스미가세키(霞が関)에 영토·주권전시관(領土・主權展示館)을 설치하고 무료로 개방하였다. 올해 9월 28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의 영토’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도쿄뿐 아니라 나고야, 나가사키, 오키나와, 히로시마 등 지방순회전시회를

72) 第28回 国会參議院 外務委員會 第7号 1958年 2月 27日

실시하고 있으며 워크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일본에서는 각 성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향해서도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이 글에서는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독도 관련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會議録検索システム)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다. 1948년부터 2020년도까지 시네마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이름과 독도를 검색하고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주요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시마네현·돗토리현은 독도와 관련하여 직접 대응을 하는 지역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분석을 통해 제시된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인식에 관한 것으로 첫째, 영유권에 대한 인식으로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주장과 영유권은 불법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승만 라인과 한일기본협약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제대로 대응하기 않은 것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다. 둘째, 현 지역어민과 어업에 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어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독도 주변 수역은 어장으로도 가치가 높으며 매우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독도 인근 수역에서 현 주민들의 어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잠정수역 관련 인식으로 이는 국제법적인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시마네현·돗토리현의 의원들이 제시하는 대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외무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해상보안청이나 해양경찰에 대해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다. 어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 참고문헌

- 김병연·이상균(2018), “일본 시마네현 고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동향-다케시마 문제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4권 3호, 20-20쪽.
- 곽진오(2010), “독도와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문화학회, 『日本文化學報』, 제46집, 47-64쪽.
- \_\_\_\_\_(2012), “시마네현(島根縣) 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통권13호, 149-174쪽.
- 문상명(2019),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제51권 1호, 415-449쪽.
- 박창건(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8권 4호, 357-380쪽.
- 서인원(2021),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 경향 분석-평화선 및 독도 어업 관련 연구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통권 제30호, 235-275쪽.
- 송휘영(2021),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과 시마네현의 독도 교육 검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통권 제30호, 67-101쪽.
- 윤유숙(2012), “시마네현 ‘죽도(竹島)문제 연구회’ 제2기 최종보고서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제4권, 214-219쪽.
- 최운도·배진수(2015),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제10권, 104-131쪽.
- 최장근(2014),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會’의 일본영토론 조작방식”, 한국일

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제44권, 393-412쪽.

한철호(2018),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県) 소학교(小學校) 지리교과서의 현(縣)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제61호, 301-343쪽.

栗林忠男 · 秋山昌廣編(2006), 『海の国際秩序と海洋政策』, 東信堂.

島根県, 『島根県離島振興計画(平成25年度~平成34年度)』

島根県, 『竹島の領土権の早期確立に関する請願書』

<Abstract>

## Perceptions and Response related to Dokdo i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1948~2020) of the Member from Shimane · Tottori Prefectures

Suk, Ju H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related to Dokdo Island as expressed via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Middle and High Council members from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in Japan. On January 14, 2005, Shimane Prefecture insisted on Dokdo Island's territorial rights, enacted the Ordinance to Designate "Takeshima Day", and promoted a movement to establish Takeshima territorial rights.

In this article, the responses and percep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 the following. First, members of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recognized that Dokdo wa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Second, local fishermen and fishing industries need to be separated from the sovereignty issue, and economic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was required. Third, although there was no specific discussion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t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arine boundary issues. As a

result, the council members from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ask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respond strongly. However, they held a conservative position regarding the Maritime Security Agency, due to the security conflict. In conclusion, council members from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pond strongly, while maintaining a cautious approach around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Key words:** Dokdo, Shimane Prefecture, Tottori Prefecture,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Takeshima genkyukai*

논문접수일: 2021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0일